

“제약업계 회계 불확실성 해소” vs “투자자 혼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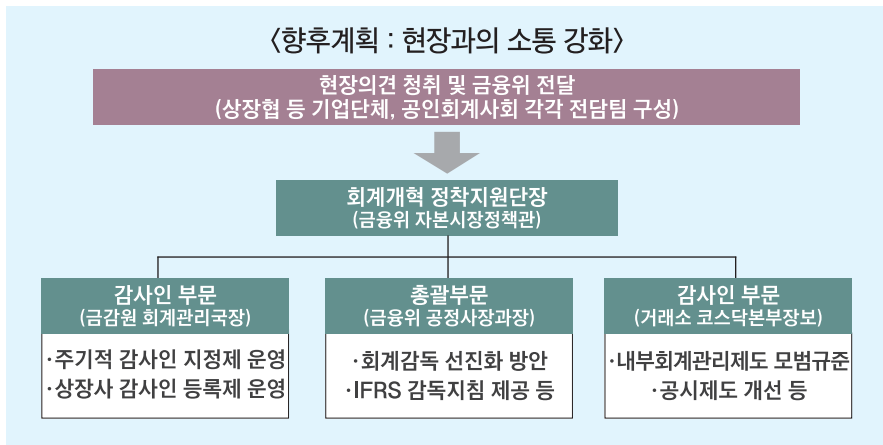
한국회계학회 선진화 포럼

IFRS 8년, 회계업계-기업 의견차 금융당국, 내일 회계감독 방안 발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계업계와 기업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비적정의 견이 쏟아지면서 투자자의 혼란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3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회계 업계와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한국회계학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웨라톤호텔에서 ‘회계개혁의 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회계선진화 포럼을 열었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 상임위원은 IFRS 도입을 추



진했던 당사자다.

◆ “제약·바이오 회계 불확실성 해소”

이날 최 위원은 “여전히 원칙 중심의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감독지침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독지침은 ▲제약·바이오기업 개발비 자산화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등 두 가지다.

먼저 제약·바이오기업 개발이 자산

화의 경우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시발점이 됐다.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전 비용도 자산으로 인식해 부채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부터 가능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최 위원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약·바이오에 오랜 기간 복제약을 생산해 왔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돼 일부 기업은 최근 신약 개발에도 과거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기준을 모든 기업에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독지침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독지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헬스케어 지수는 20% 이상 올랐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제약·바이오 부문의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제시했다”며 자평했다.

◆ “감사인의 부당행위 감시할 것”

금융당국은 원칙중심회계 도입에 따라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증가했다고 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 ▲디지털포렌식 수사 남용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제 악용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때 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최 위원은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매년 공시해 적정 감사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 역시 “상세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남용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인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거나, 퇴직자의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했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감독 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에게 IFRS라는 새 옷 입히기에만 치중하고 소프트웨어를 원칙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했다”면서 “감독기관이 제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헬싱키 시내 총리 관저에서 안티 린네 총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ICT·中企 협력 활성화 기대”

文 대통령-핀란드 총리 회담

“KSC설치 등으로 협력강화 희망”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안티 린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린네 총리는 ▲교역 및 투자 확대, ▲스타트업·중소기업·혁신 협력,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린네 총리를 만나 취임사를 축하했다. 이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지속발전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린네 총리는 1962년생으로 헬싱키 출신이다. 그는 헬싱키 대학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핀란드 노동조합 대표로 명성을 쌓았다. 이후 린네 총리는 핀란드 내 사회민주당 당수를 역임, 지난 6일 신임 총리로 취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린네 총리와 회담 때 “양국이 강점을 가진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디지털 헬스케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야에서 상호 진출이 확대되는 만큼 양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린

네 총리는 “이번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2020년 3월 운항 개시)을 환영한다”며 “(부산-헬싱키 노선 운항이) 양국은 물론, 유럽-아시아간 물리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핀란드가 유기적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혁신기술을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며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설치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MOU(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현지 혁신주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실제 핀란드에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혁신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모두 도보로 이동하도록 밀집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단지에는 VTT(핀란드 국가기술연구소, 북유럽 최대 기술연구소)와 노키아(다국적 네트워크 설비 및 통신장치 제조업체) 등이 입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승준기자 dn1114@

금융그룹 통합감독 1년 더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삼성·한화·교보 등 7곳 대상 포함 위험관리 평가 등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예상과 달리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하게 된 것. 금융위는 감독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년간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구축해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모범규준 시범운영 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기간 동안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다.

현재 감독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그룹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금융 그룹 중 비주력 업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주력업종은 생명보험이고, 비주력 업종은 증권이다. 교보증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올리는 현행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향후 법제정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비주력 업종 규모뿐 아니라 비주력 업종의 비중까지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룹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터울 경우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출자가 아닌 교차·우회출자의 경우에도 자본에서 제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A회사가 B회사로 100을 주고, B회사가 C회사에 50을 주는 등의 자본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합격선(100%)은 넘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282.3%에서 194%로 떨어졌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나머지 금융그룹도 1.5~28.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지배구조 팀장은 “정무위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 중 2~3개 금융그룹을 평가해 컨설팅과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